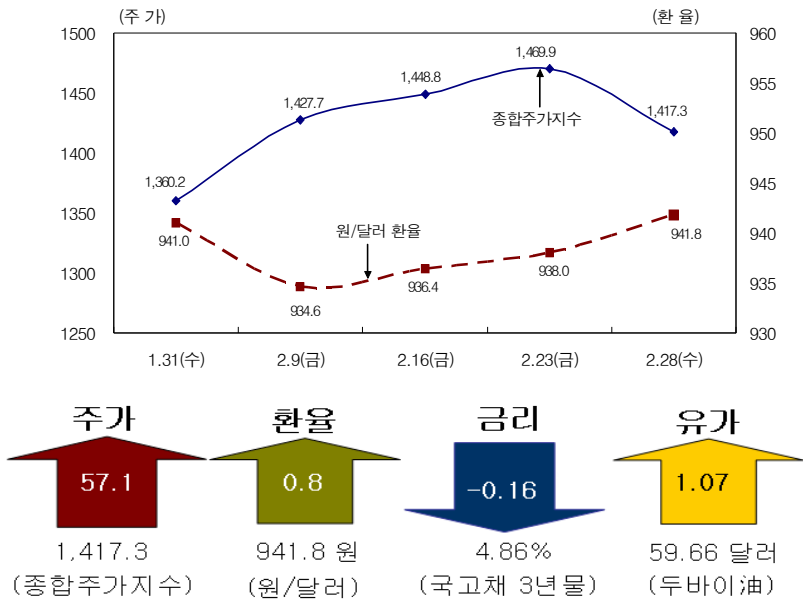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1.31~2.2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학력 인플레이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1
월간 경제 동향	12
□ 실물 부문 :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세 지속	12
□ 금융 부문 : 국내 주가 급등락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표 한 형 연구 위 원 (3669-4131, raisosa@hri.co.kr)
 남 충 현 연구 위 원 (3669-4142, netch30@hri.co.kr)

Executive Summary

□ 학력 인플레이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1. 청년 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8%대의 높은 수준이 2003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까지 치솟는다. 일자리 수 측면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후 지난 6년간 전체 일자리 수는 200만 개(연평균 33만 2천 개)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 수는 오히려 53만 개(연평균 8만 8천 개)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경제 활동의 주력 계층인 청년층의 노동력이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 구직 포기 등을 통해 사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 청년 실업 문제 지속의 원인

최근의 청년 실업은 경기적인 요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2000년 이래 경제성장률이 3~8%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청년 실업률은 8%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 실업률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와의 상관관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15세 이상의 전체 인구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1.4%에서 2006년에 27.0%로 감소(경제활동인구중 청년층 비중도 1990년 30.4%에서 2006년 19.3%로 축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노동 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 때문이다. 우선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유발 감소가 노동 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또한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부문이 위축되어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수는 2002년 71만 3,961개에서 2005년 67만 2,053개로 약 8만 개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괜찮은 일자리의 채용 기준이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고학력 청년에게 제공되는 신규 일자리 수는 더욱 제한적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졸업자(전문대학, 교육대학 및 일반대학 포함)는 1995년 약 32만 명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부터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의 중심 부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주변부문 간에 근로 조건이나 고용 안정성 등 고용 조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고학력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중심부문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저임금 계층에서 고임금 계층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요인은 특히 고학력 청년층들이 소득 기회를 포기하면서 취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보완과제

지난 2003년 범정부차원의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 수요와 성장 산업의 소요 인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직업 및 대학 교육 체계의 개편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이미 많은 청년 실업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보다는 현재의 추진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넷째, 중장기 대책으로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고용 없는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동력 확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및 산업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학력 청년층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주는 동시에 노동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교육 훈련을 통해 구직 포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학력 인플레이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

청년 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 ◆ 청년 실업률 8%대 유지 (전체 실업률 3%대 안정화)
 - 청년층 일자리 수: 2000년 이후 6년 동안 53만 개 감소 (연평균 8만 8천 개)
 - 전체 일자리 수 : 동 기간 약 200만 개 증가 (연평균 33만 2천 개)
- ◆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 준비자 포함 시,
 -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대로 증가
- ◆ 청년 실업 급증으로 노동력 사장에 따르는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청년 실업 문제 지속의 원인

- ◆ 경기적 요인이나 인구 구조 변화와는 무관
 -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7~8%로 고착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와 청년 인구 수가 동시에 감소
- ◆ 청년 실업의 주 요인: 노동시장의 질적 수급 불일치
 - 공급 측면: 학력 인플레이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선호도 증가
 - 수요 측면: 산업의 고용 창출력 약화, 기업의 경력직 선호 추세
 - 시장 경직성 측면: 비정규직 → 정규직, 저임금계층 → 고임금계층,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의 이직 기회의 부족으로 취업 준비생 급증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보완 과제

- ◆ 첫째,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 대책 마련
 - ⇒ 장기적으로 산업 고도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교육정책 필요
- ◆ 둘째, 추진 중인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 ◆ 셋째,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 탈피
 - ⇒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정부 자원 집중 투자
- ◆ 넷째,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및 투자
- ◆ 다섯째, 직업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내 이동성 제고
 - ⇒ 비정규직 → 정규직,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이동 기회 확대

□ 학력 인플레이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

1. 청년 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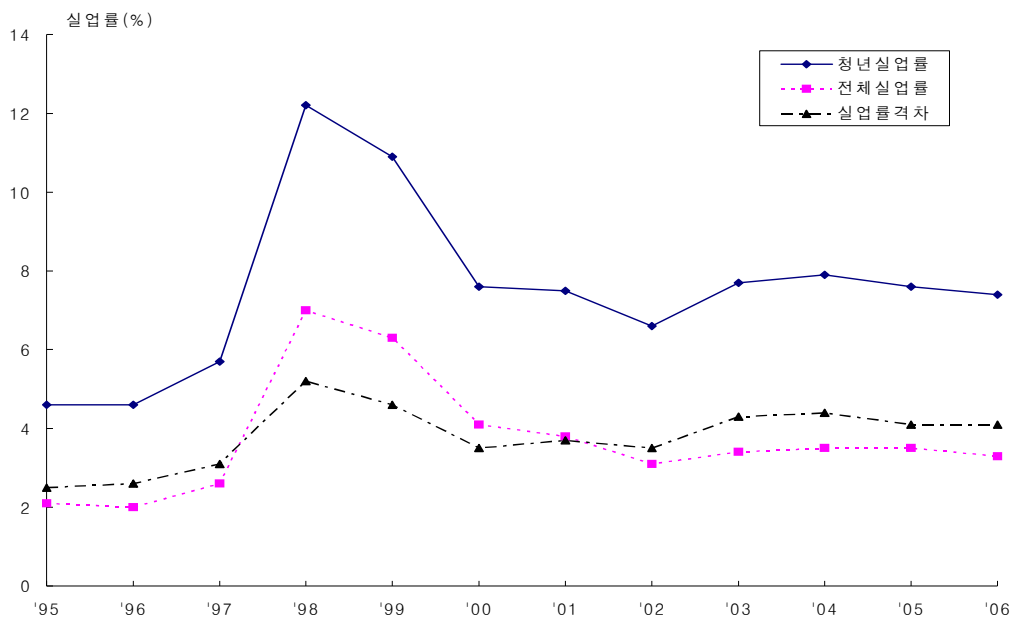
○ 전체 실업률은 3%대로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나 청년 취업자 수가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은 8%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 중임

- (청년 실업률 추이) 외환위기 당시 12%까지 급등했던 청년 실업률은 2002년에는 7%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7.9~8.3%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전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과의 격차(4~5%p)가 유지되고 있음

·한편 전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은 60%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고용률은 50% 이하를 기록하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 실업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높은 체감 청년 실업률) 2006년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준 비자를 포함할 경우 청년 실업률은 약 두 배인 15.4%까지 상승
 - 취업 준비생을 고려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약 15.4%로 동 항목을 고려한 전체 실업률 5.2%에 비해 약 세 배 높은 수준이고, 취업준비중인 비경제 활동인구를 고려한 중위의 취업 애로층 가운데 59.4%가 청년층임
 - 특히 2006년 중 청년층 인구에서 취업준비자 수는 41만 3천명으로 실업자 수(36만 4천 명)보다 약 4만 9천 명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취업 준비자에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 청년 실업률은 19.5%까지 급상승함

< 2006년 청년 취업 애로층의 구성 >

(단위 : 천명, %)

	청년층(15~29세)	전체
경제활동인구	4,634	23,773
취업자(고용률)	4,270(43.4%)	22,989(59.1%)
실업자(실업률) (A)	364(7.9%)	784(3.3%)
비경제활동인구	5,209	15,132
취업준비 ¹⁾ (B)	413	525
쉬었음 ²⁾ (C)	258	1,277
중위 취업애로층(A+B)	777(15.4%)	1,309(5.2%)
광위 취업애로층(A+B+C)	1,035(19.5%)	2,586(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용, 2006.

주: 1) 비경제활동인구에서 통학 항목의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과 그 외 항목의 '취업 준비'의 합

2) 그 외 항목의 '쉬었음'. 보통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청년층 일자리 수의 감소)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수는 2001년 이래 6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전체 일자리 수는 약 200만 개가 늘었으나 청년층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수는 2000년 대비 약 53만 개가 줄어들어 연평균 8만 8천 개가 감소
 -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0년 23.1%에서 2006년 18.4%로 감소하였음

< 취업자 추이 >

(단위: 천명)

	1991	1995	2000	2002	2004	2006
전체 취업자	18,649 (3.1)	20,414 (2.9)	21,156 (4.3)	22,169 (2.8)	22,557 (1.9)	23,151 (1.3)
청년층 취업자	5,496 (9.4) <29.5>	5,705 (1.8) <27.9>	4,879 (4.0) <23.1>	4,799 (-0.3) <21.6>	4,578 (-0.6) <20.3>	4,270 (-4.0)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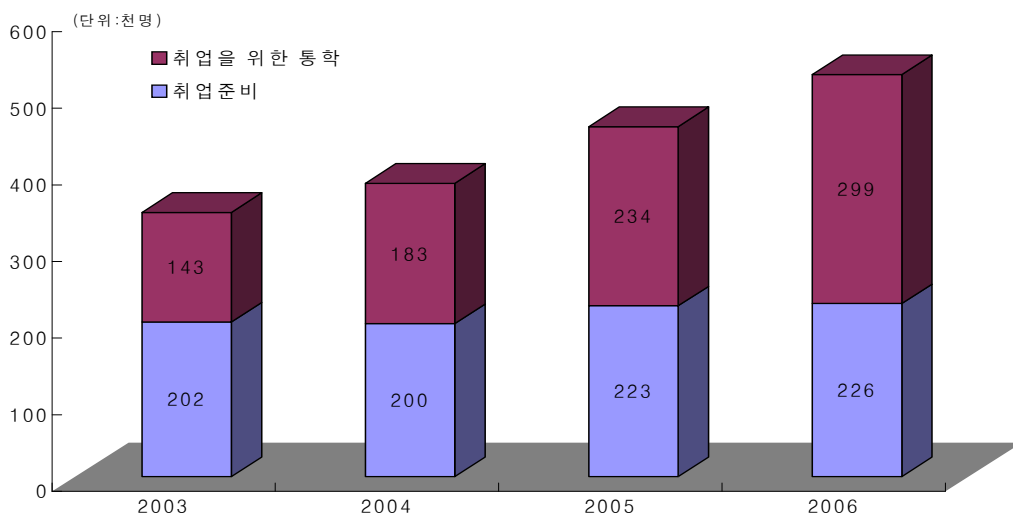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은 전년대비 증가율, < >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

○ 청년 실업 문제는 취업 준비자 급증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과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취업 준비자 급증) 이에 따라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취업 준비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기관이나 학원에 통학하는 수와 취업을 준비하는 수의 합이 2003년 34만 5천 명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52만 5천 명으로 약 18만 명 증가

< 취업 준비자수 추이 >



자료: 통계청.

2. 청년 실업 문제 지속의 원인

○ 최근의 청년 실업은 경기적인 요인이나 인구 변화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청년 실업과 경기의 관계) 청년 실업이 경기에 연동되는 효과가 크지 않아 전체 실업률과 비교하여 경기가 호전되어도 청년 실업률이 완화된다는 효과는 낮은 양상을 나타냄
 - 2000년 이래로 성장률은 3~8% 사이에서 크게 등락하고 있는 동안 전체 실업률은 3%대에서 소폭 변동한 반면, 청년 실업률은 8%대에서 고착됨
 - 청년 실업률과 경기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산업 전반에서의 자본집약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청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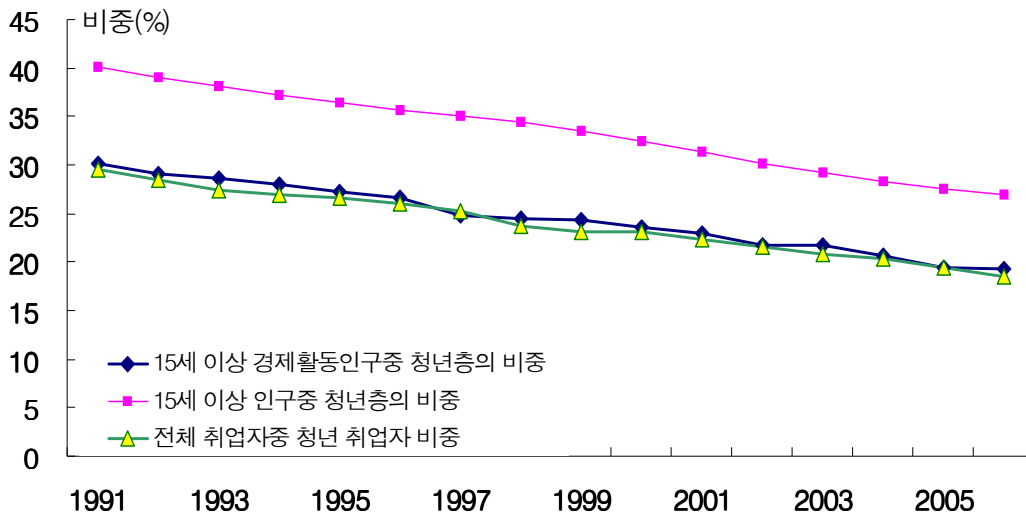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2	2004	2005	2006
GDP 증가율	8.5	3.8	7.0	3.1	4.7	4.0	5.0
청년 실업률	8.1	7.9	7.0	8.0	8.3	8.0	7.9
전체 실업률	4.4	4.0	3.3	3.6	3.7	3.7	3.5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청년 실업과 인구변동의 관계)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청년 실업은 인구의 변동과도 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노동력 구성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자 비중도 감소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
 -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0년 41.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27%를 기록하고 있고, 절대 수에서도 동 기간에 약 1,300만 명에서 1,060만 명으로 250만 명이 감소하였음
 - 또한,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비중도 1990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 19.3%를 기록하고 있고, 절대 수에서도 동 기간에 약 580만 명에서 461만 명으로 119만 명이 감소하였음

< 청년층 경제활동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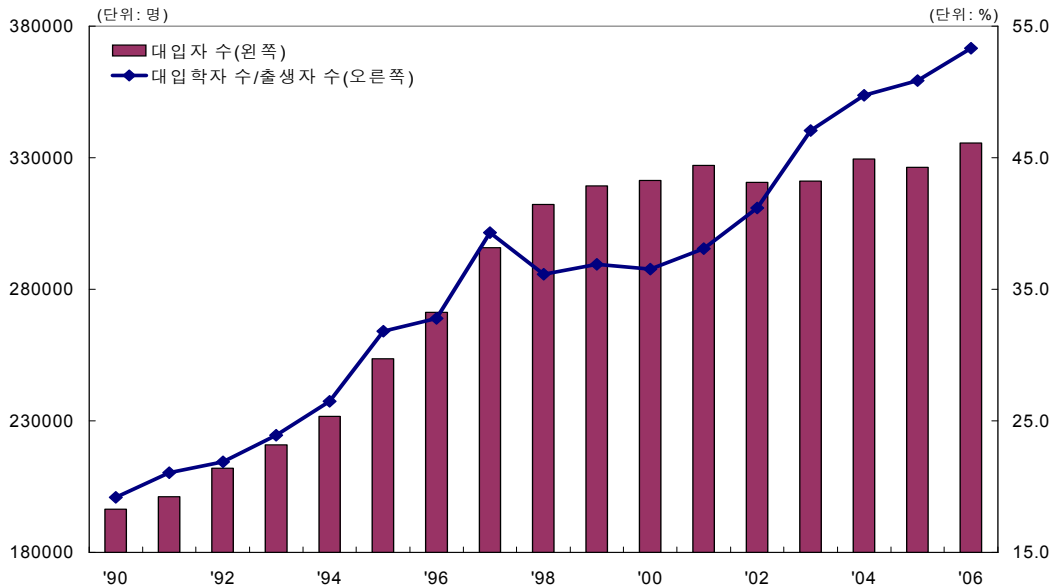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경제활동인구 조사.

○ 청년 실업은 고학력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노동 수요 및 '괜찮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수급 불일치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

- (노동공급 증가: 대졸자 급증) 산업수요에 비하여 과도한 고학력자의 증가, 특히 대학 졸업자의 급증과 근로 조건이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킴
 - 청년층의 노동력은 대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학력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신규 구직자일수록 고학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 대학(전문대, 교육대 제외)의 입학생 수가 1990년 약 19만 6천 명에서 2006년에는 33만 5천 명으로, 출생자 수 대비 일반 대학 입학률은 동 기간 19.2%에서 53.3%로 급증
 - 대학 졸업생(전문대, 교육대 및 일반대학 포함)의 수는 1995년 약 32만 명

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50만 명을 넘어섰음
 .청년층의 학력 수준 증가는 전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기대 수준(높은 임금,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높임

< 일반 대학 입학생 수 추이 >



자료: 교육통계연감, 교육부.

주: 대입학자 수는 일반대학만이고, 출생자수는 출생부터 대입까지의 통상적 소요기간을 고려한 19년 전의 출생자수를 표시함 (예: 90년 대입학자 수/71년출생자 수).

- (노동수요 감소: 자본집약도 고도화와 팽창은 일자리 수 감소) 산업의 자본 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 유발력이 축소되는 한편, 수출 호조에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팽창은 일자리’가 감소세를 지속함
- 산업의 자본 집약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에 따른 고용 창출력이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팽창은 일자리 수는 2002년의 71만 3,961개에서 2005년 63만 2,053개로 약 8만 개가 감소함
- 또한 팽창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채용 시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직 직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년층에 대한 팽창은 일자리 수의 공급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주요 분야별 관참은 일자리¹⁾수 추이 >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계	713,961	586,002	567,033	632,053
도매 및 소매업	38,618	27,166	21,137	18,104
운수업	30,456	13,122	20,153	16,345
전기 가스 수도업	12,276	13,657	15,083	20,484
금융보험업	101,158	84,006	79,554	88,112
제조업	175,481	135,854	134,083	175,288
사업 서비스업	62,167	68,110	61,008	51,507
교육 서비스업	141,667	114,769	114,911	124,777
오락문화운동 서비스업	13,575	12,240	11,609	10,145

자료: 고용보험 전산망.

주: 분야별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 (청년층 실업자중 고학력 실업 비중 증가) 이에 따라 전체 실업자나 청년 실업자나 고졸 이하 학력의 실업자가 더 많지만 청년층 실업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실업자 수는 낮아지는 반면,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고졸 이하 실업자 수는 2000년 30만 1천 명에서 2006년 20만 7천 9백 명으로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동 기간에 12만 9천 명에서 15만 6천 명으로 증가하였음
- 청년층의 대졸 실업자 비중이 2000년 3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42.9%로 상승하였음
- 취업 준비자의 급증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저임금에서 보다 높은 임금 계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상향 이동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비정규직, 저임금 업종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청년층 고학력 실업자와 취업 준비자들이 동 업종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1) 동 조사에서는 '정규직이고,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 인 일자리를 '관참은 일자리'로 정의하였음.

< 실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비중 추이 >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청 년 층	고졸 이하	301 (70.0)	279 (67.6)	231 (64.0)	251.4 (62.7)	259.7 (63.1)	238.6 (61.7)	207.9 (57.1)
	대졸 이상	129 (30.0)	133 (32.3)	130 (36.0)	149.2 (37.2)	152 (36.9)	147.9 (38.3)	156.3 (42.9)
전 체	고졸 이하	749 (76.5)	665 (74.0)	528 (70.2)	564.4 (69.0)	608.2 (70.7)	625.7 (70.6)	555.2 (67.1)
	대졸 이상	230 (23.5)	233 (25.9)	224 (29.8)	253.2 (31.0)	251.8 (29.3)	261.1 (29.4)	272.2 (32.9)

자료: 통계청.

주: ()은 연령별 학력 비중.

< 노동 수급의 양극화 >

- 급여나 작업 환경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학습, 재교육 등의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체에서는 공급(일자리)이 수요(구직)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
- 높은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300인 이하 사업체)의 인력부족 현상이 만성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업 규모별 노동력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300인 미만)	59,473 (1.40)	67,498 (1.52)	722,593 (1.54)	139,152 (2.95)	133,205 (2.66)	168,152 (2.91)	212,494 (3.53)	196,677 (3.23)
대기업 (300인 이상)	3,127 (0.22)	4,845 (0.38)	3,460 (0.28)	10,403 (0.80)	7,921 (0.55)	11,565 (0.89)	12,985 (0.99)	8,489 (0.61)
(5인 이상 전체)	62,600 (1.11)	72,343 (1.26)	76,053 (1.28)	149,556 (2.49)	141,126 (2.18)	179,717 (2.54)	225,479 (3.07)	205,166 (2.74)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 ()은 부족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연령별로는 청년층, 직종별로는 연구 개발직과 생산직, 그리고 규모별로는 5~19인 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 >

(%)

연령별			직종별			규모별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	생산직	사무직	연구개발직	5~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6.6	3.4	0.4	5.5	2.5	8.2	14.1	7.0	4.3	2.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20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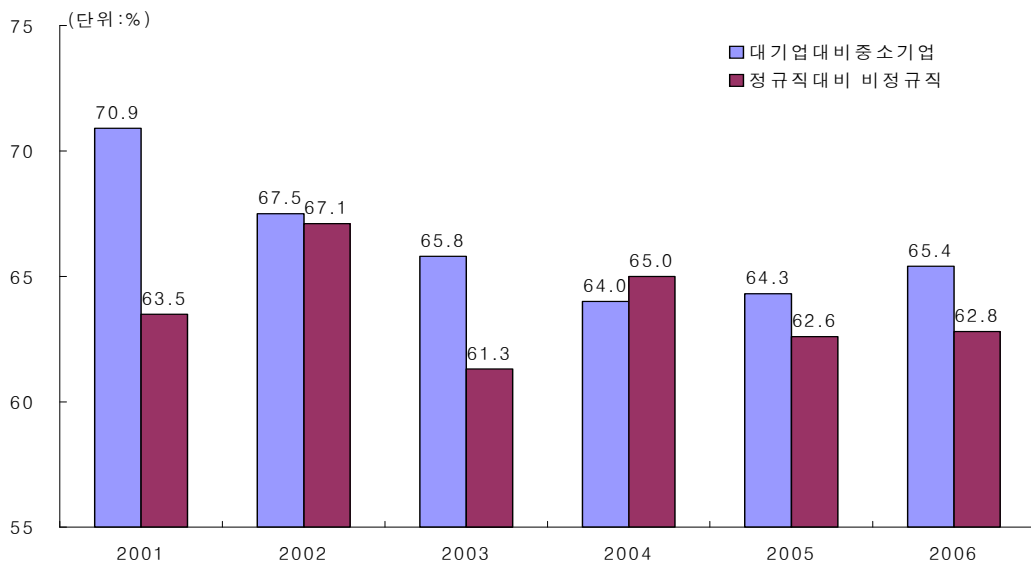
< 노동 시장의 양극화 >

- 대기업, 정규직의 중심 부분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주변 부분간의 근로조건이나 안정성 면에서 양극화됨에 따라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지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은 2001년 70.9%에서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65.4%를 기록하였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2002년에는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1년 이래 6년 동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63.7%를 기록하며 임금격차의 개선이 없는 상태임

< 기업규모 및 근로조건(정규직 및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추이 >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각년도.

3.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과제

○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 증가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수 감소에 대응한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²⁾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03년 범정부차원의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정부는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극화, 일자리 부족의 양극화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 직장체험 기회 확대 · 해외 근무 경험 확대 · 민간기업 채용 촉진 - 직업 훈련 - 취업 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기능 확대 - 산학협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육을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 · 기업 활동과 대학 교육의 연계 강화 - 청년 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와 성장 산업의 소요 인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직업 및 대학 교육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 **(종합적인 교육정책 수립)**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된 노동 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 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노동 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산업 고도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정책이 세워져야 함
- **(정책 추진 체계의 점검)** 이미 많은 청년실업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

2)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우원식,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정책제안’, 200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참조.

문에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보다는 현재의 추진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존재함

·이를 통해 추진 중인 청년층의 실업 대책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단기대책에 대한 보완과제)**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됨

·재정투입에 크게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함

·직장 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에 정부 노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할 것임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실시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함

- **(중장기정책에 대한 보완과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 강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및 산업 확대 전략이 필요

·이와 관련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평가 기준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영되어야 함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노동시장 내 이동성 제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학력 청년층에 산업현장에서 더 많은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주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임

·특히, 교육훈련이 노동시장에서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교육훈련을 통해 구직 포기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

표한형 연구위원(3669-4131, raisosa@hri.co.kr)

남충현 연구원(3669-4142, netch30@hri.co.kr)

월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세 지속

○ (경기) 경기동행지수 2개월째 하강

-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작년 11월 101.0에서 12월 100.8, 올해 1월 100.6으로 하락

○ (내수) 소비 증가세 둔화

- 소비 : 소비재판매는 12월 전년동월비 5.3% 증가에서 1월 3.1% 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 : 12월 2.3%에 그쳤던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은 1월에 16.0%로 급증
- 건설투자 : 공공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부진으로, 건설수주(건설투자 선행지표) 증가율은 12월의 전년동월비 29.8%에서 1월에 9.7%로 크게 둔화

○ (대외거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악화

- 수출 : 수출증가율은 12월의 전년동월비 13.8%에서 1월에 21.4%로 확대
- 경상수지 :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1월 경상수지 5억 달러 적자 기록

○ (고용 및 물가) 고용 부진 및 저물가 지속

- 고용 : 1월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6만 명이 감소하여, 실업률은 3.6%로 상승
- 물가 : 원화강세, 유가안정 등의 영향으로 1월 소비자물가는 1.7%에 그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경기	경제성장률	4.0	5.0	6.1(1.2)	5.3(0.8)	4.8(1.1)	4.0(0.8)	-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5.1	5.3	3.1
		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7.8	2.3	16.0
		건설수주	7.3	9.0	-8.5	-14.7	37.1	27.1	44.9	29.8	9.7
		수출	12.0	14.6	10.6	16.9	16.4	14.4	18.7	13.8	21.4
공급	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7.1	3.0	7.4	
	취업자수(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346	2,299	2,273	
	실업률(%)	3.7	3.5	3.9	3.4	3.3	3.2	3.2	3.3	3.6	
	수입	16.4	18.4	19.6	20.3	21.2	13.1	12.2	13.8	21.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11	7	4	61	42	1	-5	
	무역수지(억\$)	232	167	14	49	25	80	39	16	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1	2.1	1.7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6	2.6	1.9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이며, 소비재판매, 설비투자추계, 건설수주, 산업생산은 통계청의 개편보정 직업으로 시계열 수치가 변경됨.

□ 금융 동향 : 국내 주가 급등락

○ (해외 금융 시장) 글로벌 달러화 약세

- 금리: 미 연방준비위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를 표명한 데다 2월말 주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선호가 집중되면서 대폭 하락 (국채 10년물 : 4.80 → 4.55%)
- 환율: 월초 달러화는 강세로 출발하였으나 유로지역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 및 월말 들어 중국 증시 폭락 영향에 따른 엔케리 트리이드 청산 거래 등으로 약세로 반전 (\$/€: 1.3033→1.3187, ¥/\$: 120.69→117.61)

○ (국내 금융 시장) 주가의 급등락

- 주가: 2월 하순까지 소폭의 조정은 있었으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470(2.25.)까지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였으나, 중국 증시 폭락으로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동반 약세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급락하여 1,410대까지 하락 (1,360.2→1,417.3)
- 금리: 한은의 콜금리가 동결(4.5%)된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및 미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중순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3월 국고채 발행물량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4.85%를 전후로 등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02→4.86%)
- 환율: 월초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932.9(2.6.)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2월말 1월 경상수지 적자(5.1억 달러), 외국인 주식 순매도 전환 등으로 급등하면서 전월말 대비 보합 시현 (941.0→941.8)

○ (전망) 주가의 급등락에 따라 주식시장의 관망세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1.31.	3.1. ¹⁾
국내	거래소 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360.2	1,417.3
	국고채3년(%)	4.60	5.08	4.93	4.92	4.57	4.92	5.02	4.86
	원/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41.0	941.8
해외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622	12,234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383	17,454
	미국채10년(%)	4.32	4.39	4.85	5.14	4.63	4.70	4.80	4.55
	일국채10년(%)	1.48	1.48	1.78	1.93	1.68	1.69	1.70	1.66
	달러/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033	1.3187
	엔/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20.69	117.61
	두바이(\$/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58.59	59.66

주 : 1) 국내지표는 전일(2.28.) 기준